

무산된 선거, 네팔의 민주주의는 실현되나?

글 · 최재훈 cjhoon99@hanmail.net

히말라야는 그 아찔한 높이는 물론 극도로 험한 지형과 변화무쌍한 날씨에 베테랑 등반가들에게조차 쉽게 정상을 허락지 않는 도도한 산맥이다. 그러한 히말라야의 기슭에 위치한 탓인지 네팔의 민주주의를 향한 등정도 계속되는 난관에 부딪혀 좀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9년 동안에 걸친 왕정을 종식시키고 민주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두 번 씩이나 무산된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어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치 히말라야의 거센 눈 폭풍에 갇혀버린 것처럼 말이다.

개혁의 요구를 넘어서 민주혁명

네팔은 1768년 당시 구르카 왕국의 프리티비 나라얀 샤 왕이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있던 부족들을 통합해 건국한 군주제 국가이다. 샤 왕조는 1979년과 1985년, 1990년 세 차례의 민주화 항쟁으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입헌 군주제 국가인 네팔에서 사실상의 절대 권력을 움켜쥐고 최근까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왕과 왕실의 절대 권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고질적인 가난과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 하에서의 불평등, 부정부패에 고통을 당해 온 농촌의 농민들을 기반으로 마오주의 공산반군(CPN-Maoist)이 1996년부터 무장투쟁의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이다.

불과 200여명이 산골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항쟁의 봉화를 피워 올렸던 반군들은 네팔 전역에서 급속히 세를 불려갔고, 약 1만~1만 5천 명의 핵심 무장 대원들과 약 5만 명의 방계 조직원들을 거느리며 네팔 전역의 최소 50% 이상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

네팔은 1768년 당시 구르카 왕국의 프리티비 나라얀 샤 왕이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있던 부족들을 통합해 건국한 군주제 국가이다. 샤 왕조는 1979년과 1985년, 1990년 세 차례의 민주화 항쟁으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입헌 군주제 국가인 네팔에서 사실상의 절대 권력을 움켜쥐고 최근까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해왔다.

”

그런 와중에, 2001년 6월 희대의 ‘왕실 일가족 몰살 사건’이 일어난다. 왕세자가 비렌드라 국왕을 비롯해 열 명의 왕족들을 쏘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그 사건으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가넨드라 현 국왕은, 사건을 둘러싼 의혹 속에 왕위의 정통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는 2002년 5월 하원을 강제로 해산시킨데 이어 2005년 2월에는 내각마저 해산시키고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이는 입헌군주제를 사실상 절대왕정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가넨드라 국왕은 오히려 주요 정부기관과 시설에 보안군을 배치하고 야당과 학생, 노동조합,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해 구속시키는 등의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그 결과, 그나마 국왕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과 기대는 남겨놓고 있던 일반 국민들까지 내놓고 ‘도둑놈 국왕은 물러가라’는 요구를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 즉, 개혁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완전한 민주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진화한 것이다.

민중에게 무릎꿇은 절대왕정

이에 화답해 2005년 11월, 7개 주요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와 마오주의 반군도 인도에서 회담을 열어 공동전선을 펴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국민행동협력위원회와 노동조합총연맹, 대학생들이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드디어 역사의 새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국왕은 보안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령과 주간 통행금지로 맞섰지만 매일같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고, 마오주의 반군은 카트만두로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를 봉쇄함으로써 국왕을 압박해 들어갔다. 결국 4월 24일 자신이 해산시켰던 의회를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네팔의 절



대 왕정은 거대한 민중들의 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는다.

국왕의 항복 선언이 있는 직후에 다시 소집된 의회는 국왕이 가지고 있던 군 통수권과 면책 및 면세특권, 왕위 계승자 지명권, 법안 거부권 등을 폐지시켜 버렸다. 또한 왕실 소유의 토지를 몰수해 국민에게 분배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매년 50만 달러 씩 지원해오던 왕실 예산 지원도 중단시켜버렸다. 한편, 네팔 임시 정부와 마오주의 반군은 지난해 11월 21일, 1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내전을 끝내는 역사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그리고 올 해 1월 15일 임시 의회의 330석 중 83석을 반군에게 할당하는 임시 헌법이 통과됨으로써 반군은 유엔의 감시 아래 총을 내려놓고 명실상부한 원내 제2당으로서 임시 의회와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네팔을 향한 험난한 과정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네팔을 건설하기 위해 올라야 할 다음 봉우리는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헌법을 다시 쓰는 것이었다. 특히 네팔이 형식상의 국왕은 그대로 두되 국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명목상의 군주제 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공화정 체제로 바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제헌의회 선거였다. 그런데 6월 20일에 치러질 예정이던 선거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22일로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지난 9월 18일, 마오주의 공산당이 돌연 연정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제헌의회 선거 이전에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 선포를 하라는 것과 지역별 대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지금의 선출방식이 아닌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기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두 번째 선거 일정도 무산되고 만다.

그 배경에 대해, 마오주의 공산당이 제헌의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자 무리한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일부러 선거를 보이콧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7개 주요 정당들 대부분이 왕정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헌의회 선거 이전에 공화국 선포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 방식 또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70%를 비례 대표로, 나머지 30%를 지역 대표로 선출하는 안을 제안했듯이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오주의 공산당의 주장에도 충분히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마오주의 공산당이 제헌의회 선거 이전에 공식적으로 왕정 폐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왕정 하에서 각종 기득권을 누려온 그들은 끊임없이 선거 거부를 선동해 온데다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는 15만 병력의 군부를 이용해 국왕이 재기를 노릴 가능성도 엄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오주의 공산당의 주장에도 충분히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마오주의 공산당이 제헌의회 선거 이전에 공식적으로 왕정 폐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왕정 하에서 각종 기득권을 누려온 그들은 끊임없이 선거 거부를 선동해 온데다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는 15만 병력의 군부를 이용해 국왕이 재기를 노릴 가능성도 엄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마오주의 공산당은 왕정복고를 꿈꾸는 이들의 불씨가 혹시라도 되살아나기 전에 완전히 꺼뜨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인도와 중국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네팔과 맞닿은 인도 동북부에서도 '낙살라이즈'라 불리는 마오주의 반군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어 인도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또한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혁명이 마오쩌둥의 사상을 좇는 네팔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선을 그어오고 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마오주의 공산당의 집권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실정에서 그냥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산적인 국가 현안

'느닷없이' 선거 방식을 문제 삼는 것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지금까지 제헌의회 선거를 위해 등록된 정당의 수가 무려 62개, 그 중에는 공산당 계열만 해도 6개나 된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자칫 지역구 별로 당선자들을 각각 몇 명씩 배출한 군소 정당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이후 제정될 헌법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별로 대표를 뽑는 방식에서는 불가촉 천민과 여성, 소작 농민들 같은 소외 계층들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아주 낮고, 그것은 나라의 새로운 틀을 짜는 제헌의회 구성에서 그들이 또다시 배제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오주의 공산당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완전 비례 대표제, 즉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비롯한 현재의 정치 일정에만 매몰돼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즉 고질적인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내전 기간에 일어난 수천 명의 실종자 문제 등 산적인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아무도 그 이후의 비전을 국민들 앞에 속 시원히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물론 마오주의 공산당도 이런 비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점점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 가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다면,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이들이 언제든 그 틈을 비집고 고개를 들이밀 수 있다. 그간 몇 차례의 민중항쟁과 내전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제단에 바쳐진 1만 3천 여 명의 희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네팔의 정치 세력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진보적인 운동세력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만~~

글 최재훈 | 국제연대운동 단체 <경계를넘어> 회원이며 인권 월간 '사람'의 국제인권 코너를 담당했다.